

[종합·해설]

범여 대통합 '제3지대 신당' 급물살



범여권 대통합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형성됐다. 통합민주당 대통합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제시하며 사실상 당 지도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적어도 15명 규모의 의원들이 오는 18일께 제3지대 합류를 위한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이 대통합 추진 모임과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도 다음 달 5일께 창당 대회를 갖는다고 선언했으며, 순학규 전 지사의 선진평화연대도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통합민주당내 대통합파가 16일 민주당 탈당 및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 오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창조연대'가 내달 5일 창당하는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0여석 규모 28일 발기인 대회

■ 창당 일정 및 규모

일단 오는 18일이나 19일께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창당준비위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범여권 세력과 협력하여 창당을 위한 청탁을 한다. 24일에는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리며 이날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

제3지대 신당의 규모는 일단 60여석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민주당 대

통합파 4명,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 신당 모임 43명, 열린우리당 추가 탈당 그룹 15명 등이 주축이다.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추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후 당 대 당 통합이 이뤄진다면 최대 90석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통합민주당 반응과 전망

정치권에서는 박상천 공동대표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김한길 공동대표는 제3지대 대통합 신당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부 당내 경쟁파들은 통합민주당 사수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

당 사수 어려울 듯… 박대표 결단만 남아

사 등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김효석, 이낙연, 신중식, 이낙연 의원 등이 제3지대 신당 참여를 선언한 것은 물론, 원외위원장 70여 명과 전직 의원들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상천 대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즉, 통합민주당 사수를

선언하기는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표가 이 같은 정국 상황을 명분으로 전략적으로 제3지대 대통합 신당 합류를 선언할 가능성과 함께 다음달에나 제3지대 대통합 신당과 당 대 당 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열린우리당과 친노 그룹

열린우리당에서는 탈당파와 사수파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당내 주류 층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당장 18일께 최소한 15명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혜석 대변인은 이날 "우리당은 민주평화세력 대통합을 위한 제3지대 신당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합류할 것"이라는 입장

탈당·사수파 엇갈린 반응… 개별 탈당 합류

을 밝혀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친노 그룹은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개별 탈당을 기획, 응원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해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열린우리

당이 통제로 합류할 경우, '도로 우리당'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러운데 대통합의 핵심인 통합민주당의 발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친노 강경세력은 당분간 당을 지키면서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의 창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정치 구도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으로 양분했던 지역 정치권은 제3지대 대통합 신당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질 전망이다. 호남 민심이 이미 범여권 대통합을 통해 대선 승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분당으로 인한 분열의 폐해

호남 민심 통합신당으로 급격히 기울 듯

를 지역민들이 심각하게 경험했다는 점에서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역 정치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의 대통합 신당 참여 선언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정치인들의 통합민주당 탈당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위기의 광주비엔날레

② 감독선임방식 이대로 안된다

원칙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로 창설 13주년을 맞이했지만 예술총감독 선임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된 시스템이 없다.

조직위원장 체제였던 1, 2회 대회를 비롯 '예술감독제'로 운영된 3, 4회 대회, 예술총감독제로 운영된 5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명칭문제에서부터 감독 선임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결정하는 식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2년 5회 대회에서는 감독선임을 놓고 예술감독 선정위원들간의 다툼이 벌어져 선정 위원회가 해체되기도 했다.

1회~5회 명칭·선임방식 즉흥 결정 말썽

재단 이사 선정위원 겹치기… '입김' 작용

또 예술감독을 1인 총감독제로 할 것인가, 총감독+부감독의 2인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다가 감독선임이 4개월이상 늦어져 벌렸다. 이로 인해 4회 대회는 시간축박에 시달렸고 전시 작품들이 모두 설치되지 못한 미완성 상태에서 개막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신정아 공동예술감독의 가짜학위 파문도 이같은 감독선임 방식의 무원칙성에서 발생했다는 게 미술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감독을 받아들이려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한 내·외국인 공동 감독제로 인해 처음부터 감독 선임작업이 꼬였다는 지적이 많다.

공동감독제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 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다.

제다가 예술감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의 일부 위원들은 신씨의 가짜학위 논란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가짜 박사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조래한 것이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번 신정아씨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광주비엔날레 위상에 걸맞는 감독 선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재단 내·외부에서 감독 후보를 공개 겸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 선정위에 후보 검증에 대한 전권을 맡기기보다 재단 내부 사무조직에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선정위가 감독 선임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막중한 감독 선임권을 행사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신정아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정위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선정위의 경우 위원 11명 가운데 재단 이사가 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재단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를 폭넓게 선정위에 참여시키는 등 선정위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 연례에 걸맞는 풍부한 인력 풀과 탄탄한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춰 매번 별도의 선정위를 구성하지 않고서도 사무국 자체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감독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다"며 "미술계에서 연구나 학연을 맺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양식있는 인사가 비엔날레 이사회와 감독 선정위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신씨 고발키로

신정아씨 "가짜 의혹 전부 근거 없다" 주장

'가짜 학위' 파문의 장본인인 신정아(35·동국대 조교수)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위의 혹은 전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신 교수는 소나비는 피해가고 천천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으며, 신 교수에게 변호사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나서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문화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인사는 "지난 주말 발신자 불명의 전화를 받고 보니 신 교수였다"며 "신씨가 '한 달 정도 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광주비엔날레 등에서 자신을 포함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6일 가짜학위 파문으로 공동예술감독 선임이 철회된 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재단은 "신 교수는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오는 1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일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은 이날 "신씨에 대해 임용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용취소란 교원을 임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효되는 것으로 파면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조치다.

동국대는 신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신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